

【서평】

한반도 평화 통일전략의 선구적 선례들

김만복, 백종천, 이재정 공저,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남북정상선언』
(서울: 통일, 2015).

한완상, 『한반도는 아프다』 (서울: 한울, 2013).

이명권 (서울신학대학교 초빙교수)

I. 들어가는 말

한반도는 지금 비상시국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시작한지 한 달이 넘었고, 중국도 제재에 동참한 상태다. 남북한 분단 70년을 넘기면서도 통일의 기미는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인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40년이 넘도록 남북 간에 평화 통일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왔지만 2000년과 2007년의 제1, 제2차 남북정상회담 그 이후로는 다시 한반도에 냉기가 돌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탄생 이후 일련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졌고 그 여파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더욱 심해져 갔고, 급기야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 대북 강경책을 펴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맞서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은 최근 유엔에서 핵 개발 정당화를 주장하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지금도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쟁 연습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도 해보고, 국제 법에 의한 노력도 해 보았지만 모두 수포가 됐다”¹⁾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장기화된 분단의 고질병을 치유할 묘책은 없는 것인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한 인민을 포함한 전 국민적 노력에 앞서, 국가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정치적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떠한 통일 철학을 지니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도 통일논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2016년 4·13 총선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주도해 온 대북정책의 노선에 대해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며 심판했다. 여소 야대라는 선거 결과에 따라 보수 좌파, 혹은 진보 우파적 야당의 정치적 판단이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새롭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제에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 진보적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 논의와 실천에 몸담아왔던 노무현 정부의 통일 운동에 대한 성과물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책과 진보적 통일 사상가이자 정치가였던 한완상 전 적십자사 총재의 저서인 『한반도는 아프다』라는 두 책은 미래의 한반도 통일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중앙일보』, 2016.4.23.

Ⅱ.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와 과제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지만 분단 자체가 외세에 의한 것이었던 것만큼 문제해결의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의 문제를 어디까지나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인 1972년에 ‘7·4남북공동성명’도 있었고,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기본 합의서’도 있었다. 김영삼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의 해빙을 주도하기 위해 시도했던 남북 정상회담이 김일성의 갑작스런 서거로 무산 되었지만, ‘햇볕정책’으로 일관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얻어냈다. 그것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제1차 정상회담의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었다. 그러나 1945년의 해방직후 둘로 갈라진 분단의 긴 세월에 비하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독일의 통일 노력에 비하면 한반도의 상황은 너무도 냉전적 대결 구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노력마저 정권의 변동에 따라 연속성이 없어지면서 실효를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다행히도 2003년에 들어선 노무현 참여정부는 진보적 입장의 개방적 시각에서 결국 10·4 남북 정상회담을 얻어냈고,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길을 촉진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 물론 노무현 정부가 이룬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한반도 정책과 업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맞추어 발행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한계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책의 집필진은 김만복 국가 정보원 원장, 백종천 전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정책실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관련 핵심부서의 인물들이다. 특히 김만복은 김대중 정부시절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때에도 국정원의 중간급 간부로서 대북 전략을 책임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한 경험을 살려 노무현 정부의 ‘제2차 남북 정상 선언’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이들 3인이 공저한 이 책은 우선 기본적으로 ‘10·4 남북정상선언’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반추한다는 의미에서 발행된 것이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10·4 남북 정상선언’의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국내정세와 한반도 주변 정세를 다루는 서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평화와 번영’에 입각한 합리적 현실주의 정책이었음을 밝힌다. 북한의 내부 정세에 대한 판단에서도 북한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구력을 지닌 이유가 “물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허물어진 자리에 새로운 원시 시장경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통일 연구원의 연차보고서(2007년)의 내용과 같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다.²⁾ 북한의 대남 동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2005년 당시까지는 자신들의 내부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간간히 군사적 도발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했는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핵 문제와 함께 한국에 대한 북한의 지나친 기대와 실망감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고 밝힌다. 특히 ‘대북송금 특검수사’라든가 한국의 무력증강, 충무계획과 같은 비상계획의 언론공개, 대규모 탈북자의 한국 입국 등이 남북 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7년 들어서 대남 비방을 자제하고 한국의 대북한 정책

2) 김만복 외 공저,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남북정상선언』 (서울: 통일, 2015), p. 32.

을 저울질하면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유연하게 대체했다는 분석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기술에서는 북한이 왜 핵무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³⁾ 예컨대 한국전쟁 중에 미국의 핵무기 공격의 악몽에 시달렸던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직후부터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무기 제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1965년 소련의 협조로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했고, 1989년에는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 제조의 의심을 샀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해 왔다. 그것은 미군이 군산 기지에 핵폭탄을 배치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기인한 것이다. 미군의 전술 핵무기는 1958년 1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30년 이상 한반도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펴왔다.⁴⁾ 이에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의 끝에 ‘비핵화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고, 북한은 핵시설에 대해 IAEA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1991년 12월 13일에 상호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듬해 1992년 1월 20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하면서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용했다. 하지만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한미 팀스피리트 연습 재개를 이유로 IAEA 사찰을 거부하며 NPT를 탈퇴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서 북미 협상과 제재 등이 계속 되면서 클린턴 시절에는 북핵 시설의 폭격이라는 전쟁의 위기도 발생했다. 그러면서도 핵연료 공장 동결 대신에 경수로 지원을 약속하는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서로간의 견해차이로 북한은 2003년 2월 원자로를 재가동함으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3) 위의 책, pp. 48~55.

4) 『동아일보』, 2005.7.27.

8월 베이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6자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진전은 없었다. 그 후 2004년 2월 베이징에서 '제2차 6자회담'을 열었으나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소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나 BDA의 북한 계좌 동결문제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2006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북미 간의 비밀 협상 결과 2007년 2월에 제5차 6자 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문제는 숨 가쁘게 핵실험과 비밀 협상이라는 줄다리기를 수십 년간 지내오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가장 큰 한반도 평화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주적 체제 안보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탈냉전 이후 점차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정권유지 보장을 얻으려는 외교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⁵⁾는 점은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해결하고자 했던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 것이었다.⁶⁾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여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던 중에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1차 연평해전에서 크게 패한 북한은 1999년 9월 NLL을 전면 부인하였고, 2000년 3월 새로운 '서해 5도 통항 질서'를 공포하였다. 그 후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남북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2002년 6월, 북한 경비정의 선제공격으로 제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NLL 침범이 문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 초기 제1,2차 연평해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를 내렸고, 재임 시에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 2004년 6월 설악산

⁵⁾ 김만복 외 공저,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남북정상선언』, p. 53.

⁶⁾ 위의 책, pp. 56~63.

에서 ‘제2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쌍방 합선 간의 공용 통신 주파수’를 합의하였던 결과다.

이상의 내용으로도 참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불안정하게 지속 되어왔던 화해 협력 시대의 정착과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사명감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햇볕정책을 계승하면서도 ‘평화변영정책’을 천명하였다.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6·15 남북공동성명’ 이후 북핵문제로 인한 북미 관계 경색과 대북송금특검,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남 갈등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특히 ‘10·4 남북 정상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약 4년간 참여정부의 남북 경험실적은 국민정부의 5년간 실적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개성공단의 가동과 활성화가 분단사상 최초의 성과였던 것이다.⁷⁾

본서는 또한 한반도를 바라보는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한다.⁸⁾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하자 미국은 ‘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안’을 제안하는 등 북한을 실효적 정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한반도 정책을 선회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보이자 한미 관계가 경직되기도 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부시 독트린’을 만들어 10월 7일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2003년에는 생화학무기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으며 2006년에는 후세인을 처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목도한 북한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더 큰 위

7) 위의 책, pp. 64~69.

8) 위의 책, pp. 70~87.

협을 느껴서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⁹⁾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한국 또한 중국의 제3위 교역국이다. 이러한 관계로도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한 제2차 한국전쟁이나 한반도의 긴장도 원하지 않고, 오직 미군이 주둔하는 통일 한국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한반도 상황을 ‘1민족, 2정권’으로 보고, 한반도 위기상황에서는 ‘행동의 자유권’을 택하고자 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다만 평화공존이 장기화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 군사 경제면에서 일본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남북 분단의 상황을 일본은 더 선호한다고 밝힌다. 더구나 핵무기의 피해를 보았던 일본인들로서는 북핵문제에 더욱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1990년 한소 수교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1986년 이후에는 러시아가 북러 관계 회복을 시도했고 상호협력 관계에 있다. 물론 6자 회담의 중재 역할도 크며, 통일 한국이 장차 중, 일 양국의 ‘세력 균형자’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유일하게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나라다.

본서의 제2부에서는 대북 특사파견에서 선언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긴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의제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 ‘북핵문제’였고, 그 다음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NLL)였다. 정상 회담에 이르는 자세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신의 제거였다고 했다.¹⁰⁾ 제3부에서는 10·4 정상 회담의 협의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9) 위의 책, p. 73.

10) 위의 책, pp. 100~126.

남북이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자는 데는 합의하였다. 그것을 ‘10·4 남북정상선언’의 각항에 명문화 하였다. 이른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 협력이었다. 이 밖에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투자장려와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추진,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의 공고한 발전과 개성 신의주 철도, 개성 평양 고속도로를 개보수,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발전, 백두산 관광실시와 백두산 서울 직항로 개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사업 추진, 자연재해 재난 발생 시에 상부상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합의했다는 내용이다.¹¹⁾

제4부에서는 ‘10·4 남북정상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과제, 그리고 ‘공동선언’에 비판과 답변 등으로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10·4 남북정상선언’ 제3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선언은 1992년의 남북 기본합의서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10·4 남북정상선언’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국제공조와 남북관계 발전의 ‘상충성’ 문제라든지, 북핵문제의 구조적 ‘경직성’,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정권의 ‘소극성’, 남한 단기 정권과 북한의 장기정권 간 협상의 ‘비대칭성’, NLL 문제의 ‘민감성’이 한계로 지적 되었다. 이에 따른 과제로서 남북정상선언의 이행문제와 북핵문제, 군축, 북한 인권문제,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등이 과제로 남았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한 ‘10·4 남북정상회담선언’에 대한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서 두터운 본서의 말미를 장식한다.¹²⁾

11) 위의 책, pp. 188~350.

12) 위의 책, pp. 354~415.

Ⅲ. 한완상이 느끼는 ‘신음하는’ 한반도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 시절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1993년)을 역임하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총재(2004-2007)를 지냈던 한완상 교수가 15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체험했던 현대 정치사를 일기 형식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증언을 『한반도는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부제가 말을 해 주듯이 분단된 한반도의 운명을 말해주는 ‘적대적 공생의 비극’을 실감나게 전해주고 있고, 왜, 남한의 극우와 북한의 극좌는 공생하는가 하는 아이러니한 역설의 비극을 담담하게 아니 비통한 필치로 현대정치사의 현장을 담아내고 있다. 2부로 구성된 본서는 제1부에서 김영삼 문민정부의 ‘개혁과 통일의 꿈(1993-1998)’을 다루고 제2부에서는 김대중 국민정부의 ‘오해받던 햇볕정책, 역사적 평가 받다(1998-2007)’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¹³⁾

그 이후 최근에 이루어진 한반도 관련 기록은 대담 형식의 부록으로 ‘2013년을 말하다’에서 정전 60주년, 한미 동맹을 유지하며 한중관계 강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그리고 한완상 부총리와 그레그 전 대사와의 대담에서 “비핵화보다 비확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와의 대담에서는 ‘박근혜 독트린’, 역사적 행운을 놓치지 말라고 제언하고 있다. 예컨대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귀환’에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악화되던 시기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현상 타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과 그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13) 한완상, 『한반도는 아프다』 (서울: 한울, 2013), pp. 25~462.

특히 2013년 김민웅과의 대담 내용을 보면, 한완상은 한반도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건강 상태에 비유하고 있다.¹⁴⁾ 정전 60주년을 맞는 해에 오히려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도 과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북정책을 펼치자고 취임사에서 강조하면서, 미전향 장기수 리인모씨를 북송했던 일을 상기시킨다. 문민정부 당시의 남북간 현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북핵 사찰문제와 팀스피릿 훈련재개 그리고 리인모씨 북송문제였다. 노태우 정부가 북방문제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3가지가 늘 벽에 부딪쳐 한계 상황에 있었을 때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이 가운데서 북한 정부가 가장 심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리인모씨 북송문제를 결정했는데, 바로 다음 날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함으로써 상황은 뒤엎어버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보다 20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그나마 노력해서 이뤄놓은 성과들도 홍수에 밀려 떠내려가는 것 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

한완상은 문민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적어도 김영삼 정부의 몇몇 개혁파 인물들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내각이나 집권당 차원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 특히 북한의 NPT 탈퇴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보수 세력에서는 문민정부의 대북정책을 좌절시키는 일을 즐기게 해 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떠한 동맹도 민족을 우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취임사를 작성한 한완상의 입장을 역공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의 핵시설을 정면 폭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시기의 국민적 불안감 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낫

14) 위의 책, pp. 491~593.

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임을 밝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90년대 보다는 북한의 대응이 상당히 강력해졌다는 것과 한국의 국제적 가치나 역량이 높아진 상태에서 전쟁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겹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영삼 정부 때나 현 박근혜 정부 할 것 없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와 생각이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김영삼 정부 때에도 “YS와 그 주변 참모들은 남북 관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끌고 가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다.”며 날이 갈수록 취임정신에서 이탈하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대담 속에서 한완상 교수가 밝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클린턴 정부가 북핵을 공격하여 전쟁 위협의 상황으로 가려던 것을 카터와 주미 대사였던 레이니가 전면전으로 번질 전쟁의 위기를 막아내고 카터의 주선으로 김일성과 김영삼의 정상회담을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당시 8군 사령관이었던 릭 장군의 판단으로는 “만약 북한 핵 시설에 정밀 폭격을 하면 평양은 전면전으로 나올 것이고, ... 며칠 사이에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예상했다.”는 것이다. 물론 군사비용은 천억 달러, 경제손실은 1조 달러는 내다보았다. 그런 점에서 카터의 북한 방문은 한국에 큰 위기를 모면하게 해 준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YS는 카터의 방한 자체를 기쁘게 여기지도 않다가 남북 정상회담 약속을 받아 오고서야 기쁘게 맞이했다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김일성이 돌연 사망하였고, 남쪽은 ‘조문파동’으로 또 한 차례 남북한의 상황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점이다.

20년이 지난 지금의 사정은 또 달라졌다. 당시는 비핵화가 주요 의제였으나 이제는 비확산이다. 중국의 역할이 과거보다 달라졌고 커졌다. 거기에 2011년부터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세웠다. 대중국 견제와 함께 포용과 협력의 정책도 추진하게 되었다. 중국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을 대하는 공조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 방식이고 하나는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다. 하지만 2013년 당시의 상황은 대화 보다는 제재 쪽으로 중국도 공조하게 되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고강도로 불쾌하고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3년이 지난 오늘의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고 더욱 서로가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이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권 취임사를 보고 감동했다는 김일성이 NPT 탈퇴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세가 김일성보다는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한 것이 사실이며, 김일성의 돌연사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했다는 점도 시대적 불운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이후에 등장한金正은은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미국의 가공할만한 신무기 앞에서 공포심을 가진 김정은이 대응할 방편으로 유일하게 핵무기에 매달려 과잉반응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러한 전후 맥락을 고려해야 현 사태를 풀어나가는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충고한다. 한편 한반도에 우발적 상황으로 인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위기 발생 시에 안전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나 제 기능을 못한다면 이것 또한 평화적 해법을 가로막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 한완상은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정상수교를 하는 것이 궁극적 요구사항인 만큼 미국이 핵 비확산 문제를 협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부터 오바마까지 20년 동안 민주당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 내의 정치 환경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정치가 이제는 후퇴해서 근본주의, 원리주의적인 대결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한다. ‘전략적 인내’ 5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주력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피주기’ 때문이 아니라, 대결주의가 핵무장을 강화했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벼랑 끝 강경책은 결국 대화하자는 것이며, 베트남과 중국처럼

대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난 것처럼.

김대중 정부의 금융위기나 노무현 정부 시절의 강경한 부시의 군사적 대응책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역사적 운이 좋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국이 평화체제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마지않는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명박 정부가 계승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과의 안전보장만 이루어지면 핵은 포기하겠다는 것이 과거 북한의 논리였다면 미국은 그 기회를 놓쳤고, 이제는 핵 보유국가가 된 상태에서 비확산에 주력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오늘의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는데,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과 정식으로 국교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교차승인의 구조가 불균형한 상태다. 그 이유에 대해 한완상은 남북대화 진전을 위해 중단했던 팀스피릿훈련을 재개했던 미국 네오콘을 비롯한 공화당의 매파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들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야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힘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미국을 설득할 내용은 한국이 중국과의 중요 무역국으로서 한반도의 안정이 곧 동아시아의 안정적 기반을 바라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내에 그런 의지를 가진 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자신부터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6·15 선언과 10·4 선언 내용부터 존중하고 실천하는 실용적인 대화구축을 시도해야 한다. 이것이 신뢰 프로세스의 실질적 가동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5·24 조치의 해소, 금강산 관광재개가 출발이다. 물론金正은이 4차 핵실험을 한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강경책을 더욱 강화하는 지금의 입장에서 박 대통령이 5·24조치를 해제할 의향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자세에 관한한 언제든지 대화의 자세를 갖추고 전향적인 통 큰 외교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통령과 오바마가 정전 협정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전 세계 냉전의 마지막 표상이요 산물인 한반도의 아픔은 종식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IV. 나아가는 길

분단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70년이 지나가는 긴 세월동안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주체적 평화통일의 역량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분단의 고착화는 더욱 심해가고 있다.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의 보수주의적인 대북 강경론파와 진보주의적 대북 온건파가 늘 대립각을 세우지만 주변 여건상 보수 우파가 이끄는 정부 혹은 정당이 늘 우위를 점하면서 대북 정책에 관한한 강경 일변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 1972년에 남북 7·4 공동성명을 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 보고자 시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그 후 약 20년이 지나서야 소비에트 붕괴로 말미암은 냉전 종식에 따라 노태우정부가 1991년 12월 31일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었고, 1992년 1월 7일에는 티스피릿 군사훈련 중지 발표를 했으나 몇 가지 이유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3월 12일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면서 다시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노태우 정부로부터 이월된 핵문제를 김영삼 문민정부가 잘 풀어 가고자 했으나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김정일의 군부체계에 맞선 남한 정부의 보수적 대북정책으로 다시 핵문제 해결에는 진전이 없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한완상은 ‘햇볕정책’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고, 끝내 김대중 국민정부에서야 ‘햇볕정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완상의 대북정책은 YS보다는 오히려 DJ의 비전에 훨씬 더 적합했다는 자신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퍼주기’라는 많은 오해를 받아왔던 ‘햇볕정책’이 오히려 최근에 와서 다시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대중 국민정부에 이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7년 10월 4일에 제2차 남북정상선언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화해의 봄이 오는 듯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5·24 조치를 단행하고 오늘의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그 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북핵 실험이라는 장애 요소가 있었지만 티스피릿 훈련 등과 관련된 복잡한 군사·외교적 문제들이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을 끝까지 강경한 자세로 몰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포용적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최고 통수권자의 통일철학이 담긴 결단의 문제였다. 한완상이 밝히는 통일철학도 여전히 ‘햇볕정책’으로 압축되며 그것을 김영삼 정부에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사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며, 김대중 정부에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 김만복 국정원장 등이 주도한 남북 대화의 물꼬트기도 사실은 ‘햇볕정책’의 연장선이라 해도 좋은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 당사자만이 해결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 양상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시각에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내의 매파인 공화당의 정치적 욕망에 따라 한반도

의 사정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한반도는 아프다’는 한완상의 통절한 탄식이기도 한다. 이제는 우리민족이 정말 좀 더 성숙한 자세로 남북 분단의 정치적 함수와 국제 관계의 이해문제를 숙지하여 입법부와 최고 통치권자들이 민의를 수렴하여 남북한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북미 평화수교와 한반도 비핵화의 놀라운 성취가 있도록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 점에서 한완상의 『한반도는 아프다』와 김만복, 백종천, 이재정이 공저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 통일의 새 길을 개척하는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다.

이명권(Lee, Myungkwon)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초빙교수이며, 평화통일연구원 연구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석사,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 길림대학교에서 중국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길림사범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최근에는 서울신학대학교 평화통일 연구원에서 활동하면서, 『통일로 가는 평화의 길』(열린서원, 2015)을 공저하고, 『평화와 통일』(창간호, 2016) 학술지 간행과 편집에 참여하고 있다.